

한-미, 민간수출 통제 메커니즘 도입 기후변화 대응·공급망 확보 등 기대

산업부, 원전수출 원칙 MOU 가서명
원자력 기술협력 체계화, 분쟁 예방
고위 관계자 “갈등유도 효과 있을 것”

한미 양국이 양국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상시적인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입찰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간 원전 기업 간 수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미 양국은 5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11월 1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양국은 그간 우리 산업부·외교부와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양일간에 걸친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이번 MOU에 가서명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과 미국 엔드류 라이트 에너지부 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측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로써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간 소송에 직접 영향을 주진 어렵지만, 긍정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간 소송 대응 차원인지 묻는 질문에 “체코 원전 계기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웨스팅하우스-한수원 소송 등)를 근본적으로 풀려고 노력하려 한 것”이라며 “(양측이)분쟁을 빨리 종식시키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기업 분쟁이 처음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한미 정부간 서로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이번에 (한미간 원전 협력)확

실하게 구축된 것은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간 신뢰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간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과거 발생한 이슈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 통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나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미래지향적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 같은 장치들이, 현존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갈등 등)이슈를 해결할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갈등 해소를)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번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 서명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며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연내에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청년층 87%, ‘임금·복지’ 기업 규모보다 중요

고용부,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MZ세대, 직무적성·흥미 우선 고려 63% “임금보다 삶의 균형 중요해”

청년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는 규모보다 임금, 복지, 워라벨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희망 임금을 3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고, 필수복지제도로는 특별휴가와 유연근무 등이 언급됐다.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17개 시·도 청년(19~34세) 4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

에 따르면 청년 대다수(87.0%)가 ‘임금·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63%는 임금과 복지보다 워라벨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59.1%는 직장선택 시 임금을 고용형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임금수준은 ‘300만~350만원’(25.9%)이 가장 많았으며, 76.3%는 ‘300만원 이상’을 원했다. 적정 근무시간은 ‘40~45시간 미만’(50%)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35~40시간’(16.0%)과 ‘30~35시간 미만’(10.8%)이 순위를 차지했다.

필수적 복지제도에 대한 질문에서 ‘안식년, 장기근속 휴가 등 특별휴가’(38.5%), ‘유연근무’(35.4%), ‘채택근무’(31.1%)가 병원비·경조사비·대출지원 등 금전적 지원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무를 원하며, 직무 전환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직무수행에서 ‘적성 및 흥미’(67.7%)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육 수준’(54.5%)이나 ‘기술 수준’(59.4%)보다 높은 수치다. 직무 전환 고려 여부 질문에는 48.4%가 ‘직무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농업기술 협력·식량안보 대응 모색

서울서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한국과 카리브해(+일부 남미) 지역 관계자들이 5일 서울에서 만나 기후대응 및 식량안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

히, 서인도제도 식량 자급 및 농업 발전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후 외교부와 농촌진흥청은 ‘제14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와 카

리브 국가들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김홍균 외교부 제1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농업협력 사절단의 자메이카 방문, 농진청과 카리브공동체 간 농업기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스마트 홍수 알리미’로 국민 안전 강화

환경부,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 제공
AI로 홍수특보 발령 시간 3배 단축

정부가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 홍수 알리미’ 기반의 홍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홍수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스마트 홍수 알리미’ 도입으로 올해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홍수 알리미는 환경부가 홍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시스템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홍수 예보,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 지역에 대한 안내 문자 등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홍수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보를 실시했다. AI가 매 10분마다 하천수위를 자동으로 예측하고 위험 알람을 제공하면, 홍수예보관이 이를 검증한 후 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를 발령하는 체계가 운영됐다. 이로 인해 홍수특보 발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감

소시킬 수 있었고, 전년 대비 약 3배 늘어난 지점(75개→223개)에서 신속하게 홍수특보를 발령할 수 있었다.

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 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예보했다. 지난해 서울(도림천)에 이어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도시 침수 예보를 확대 실시했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에 총 56회 알렸으며, 저지대 지역의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수특보 발령 등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개선해 홍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에는 차량 운전자가 홍수 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41건의 홍수 경보 발령 정보와 64건의 댐 방류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해 지하차도나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의 운전 시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도입한 스마트 홍수 알리미 기반의 홍수대응 경험을 토대로 세부사항을 개선해 홍수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친환경·디지털 중심 에너지ICT 기업 실현”

한전KDN, 박상형 신임 사장 취임

한전KDN 박상형 신임 사장이 지난 4일 전남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중심 에너지ICT 전문기업 실현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글로벌 에너지 디지털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과 도약, 현장과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 상생 경영 실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을 실천하겠다”며 “최근의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제2의 창업 정신으로 재구조화(際舊布新,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베풀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사장은 1962년생으로 강원도 양양 출신이다. 수도권전기공고를 졸업하고 방 송통신대 통계·데이터과학 학사와 숭실대 IT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한국전력 입사 후 2001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직, 디지털혁신추진처장, 경영부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박상형 한전KDN 신임 사장이 지난 4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전KDN

2015년 원자력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21년 원자력 안전진흥 유공 관련으로 국가산업발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등 원자력 산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2014년 한수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당시 사이버보안팀장으로서 문제 해결에 중책을 담당했고 숭실대 겸임교수와 중앙대 지능형에너지산업 융합학과 특임교수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도 매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육아휴직·실업 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고용부,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친인척 관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 활동 없이 해외 체류 중 타인이 대리 신청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되며, 부정수급 금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세종=김대환 기자